

특별기고

‘행복한 복지 7979센터’ 가난이 두려운 사회 바꾼다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 종류만도 수백여개에 달하고, 광주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급여 종류만도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에는 급여 종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산재해 있었다.

겠지만, 최소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고민 끝에 민선 7기 구청장에 당선된 후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을 공약 사업으로 진행해 왔다. 그리고 지난달 17일부터 센터 운영이 본격화됐다.

포괄적 서비스 원스톱 제공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을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통합적인 복지지원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가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라는 판단도 들었다.

우리 사회에 커다란 슬픔을 안겼던 서울 송파구 세 모녀를 비롯해 중증 모녀, 망우동 모녀 사건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다.

중증 모녀는 가정양육 수당 외에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하지 않기에 이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케이스였다.

망우동 모녀의 경우에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고령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았고, 모녀가 벌이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월 최대 87만원의 생계급여와 월세로 최대 60%까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지 못했을 수도 있고, 주변 이웃들이 이들의 생활살이를 지자체에 귀띔해줬더라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죽음보다 가난이 두려운 사회를 멈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행복한 복지 7979센터’가 그 대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선 7기 첫 선을 보인 ‘행복한 복지 7979센터’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사회 복지 분야를 비롯한 보건·고용·주거·교육·문화 등 각종 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조직체계로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곳 센터를 통해 서비스 상담부터 실질적인 지원, 성방향 소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취약계층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한다.

남구청 한 해 예산의 64%가량은 복지 분야 예산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돼 주민 모두가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도록 하는데 ‘행복한 복지 7979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웃 돌보는 ‘복지남구’ 실현

또 ‘행복한 복지 7979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곳 센터와 연계한 봉사단 구성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봉사단이 만들어지면 송파 세 모녀 등의 사례에서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어려운 이웃들이 주민들의 도움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또는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지역공동체에서 이웃을 함께 돌보는 행복한 ‘복지 남구’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걷는다.

사설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철저히 해라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면서 ‘혈세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07년 준공영제 도입 초기 196억원이었던 재정지원금이 이듬해인 2008년 293억원, 2010년 352억원, 2014년 445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임금과 연료비 인상 등을 고려할 때 77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의 민간영역 확대에 따라 8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버스조합이 책임지고 있어, 업자가 도덕적해이에 빠지거나 광주시의 관리 감독이 소홀할 경우 자칫 혈세낭비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규정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법과 환수 주체, 감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방만 운영을 부채질할 우려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개선과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감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박미정 시의원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감사를 통해 준공영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이같은 움직임을 시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이번 감사로 한 점 의혹 없는 준공영제 운영이 됐으면 싶다.

‘소년법’ 기준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친구를 장기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경찰이 혐의를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결과 폭행당한 피해자를 랩으로 가사를 지어 놀리고 물고문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잔혹성이 심각하다.

나온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성숙도를 반영해 ‘축법소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나이 기준을 낮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축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불분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기준이다. 중학교 2학년(만 13~14세)을 기점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청소년들도 잘 알고 있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연령기준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된다.

‘축법소년’은 범죄자의 교화와 빠른 사회 복귀라는 소년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면 처벌 강화나 소년법 폐지는 조심스럽다. 가해자를 교화하는 일이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일보다 앞설 수 있는 가라도 비판도 맞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소년법 연령 기준과 형량 감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상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이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되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선고 18세 이상의 나이가 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만5,000명이 참여하는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나이가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를 반드시 감명해야 한다. 둘째, 정책 실행에 도입이다. 지방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정책과 사업은 담당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의 상황에 대해 일정 기간 책임을 묻지 않는 자율적이고 탄력적 행정력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성과측정과 평가방법의 개선이다. 사회복지 업무는 휴먼 서비스라는 특성이 있다. 이는 투입대비 성과평가를 경제학적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분야이다. 정량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성평가의 무적 할당 등이 도입해야 한다.

넷째, 잦은 인사이동 개선이다. 전문가 임용제도를 도입하고, 소명감을 갖춘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조직환경을 만들어 주며, 기피 업무 담당자에 대해 과감한 성과보수를 제공해야 한다.

‘정의로움 만큼, 필요로움 세상’,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적도는 행정조직을 복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람 중심 평가방식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때 시작된다. 이것은 상식이자 순리이다.

어 경제적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문득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한 말씀이 떠오른다. “환난(患難)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위해 기본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은 공짜가 아니다. 화재를 겪어본 사람은 그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한다. 소방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큰 인적·물적 피해를 봤다고 할 때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박수희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박수희

기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는 복지행정 혁신에서 시작



박미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우리의 지난 70여 년이 압축적 경제성장과 원시적 복지체계의 구축 시도기였다면, 지금부터는 복지와 경제 그리고 노동이라는 세 개의 축이 국가발전과 지역자치와 분권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향과 전환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복지 수요 양상, 복지제도의 집행영역과 방법, 사회적 서비스에 관여하는 제공 주체들이 점차 복잡다단해지고 이를 지원할 행정영역의 과제도 다층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복지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에 부응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격(格)을 갖추기 위해 우리 시의 복지혁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단언컨대, 복지 중심으로의 행정력의 재편과 집중이다.

시 복지 관련 행정력을 살펴보면, 2019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 예산과 사업은 1조9,119억 원, 69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공무원 129명(3.6%), 사회복지직 366명(1%)이 담당하고 있다. 예산과 의사결정권이 주어 진 과장급 이상은 사회복지직 한 명도 없고, 5급 간부직이 복지건강과 3명, 여성가족정책관실 1명이다.

시 전체 예산의 39.8%인 2조 예산을 129명이 집행하고, 시비로 진행되는 지방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 예산 156억 7,000만원을 126개 단체 16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 업무는 대민업무로, 보조금 지급 및 결산 검사가 중요하다. 하지만 예산대비 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엄격하고 공정한 사전 심사 및 검사 예산지원 후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원칙적인 결산 검토 및 사후관리가 구조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 이러한 상황은 복지혁신의 입계점이다. 즉,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행정조직 재·개편을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복지부동의 행정에서 창의·역동적인 사람 중심의 복지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선 7기 시정 방향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와 풍요는 복지서비스이다. 그러므로 복지 중심의 행정 재·개편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복지 행정 드림팀의 구성이다. 사회복지직 인력충원과 동시에 일에 대한 열정과 신념 업무에 대한 소명 의식을 지닌 사람들을 발탁해 적재적소(適材適所)를 넘어서는 적소적재(適所適材)의 인사

를 반드시 감명해야 한다. 둘째, 정책 실행에 도입이다. 지방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정책과 사업은 담당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의 상황에 대해 일정 기간 책임을 묻지 않는 자율적이고 탄력적 행정력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성과측정과 평가방법의 개선이다. 사회복지 업무는 휴먼 서비스라는 특성이 있다. 이는 투입대비 성과평가를 경제학적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분야이다. 정량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성평가의 무적 할당 등이 도입해야 한다.

넷째, 잦은 인사이동 개선이다. 전문가 임용제도를 도입하고, 소명감을 갖춘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조직환경을 만들어 주며, 기피 업무 담당자에 대해 과감한 성과보수를 제공해야 한다.

‘정의로움 만큼, 필요로움 세상’,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적도는 행정조직을 복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람 중심 평가방식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때 시작된다. 이것은 상식이자 순리이다.

어 경제적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문득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한 말씀이 떠오른다. “환난(患難)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위해 기본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은 공짜가 아니다. 화재를 겪어본 사람은 그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한다. 소방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아 큰 인적·물적 피해를 봤다고 할 때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박수희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박수희

특지광장

화재경보기 설치로 대형사고 예방하자

가족 분화와 연령층의 교령화는 노인 요양시설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소방 관서에서 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무엇보다 초기 소화와 피난이 중요하다.

설치된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노인 관련 시설 등 소방 대상물은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법에 관계된 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등 안전인명 대피로 인한 이득을 감안하면 점검 비용은 전기·가스비용처럼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정 소방대상물 건물주는 소방특별조사 시 소방시설 고장·방치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소극적이다. 소방시설은 화재가 나지 않는 한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지난 경북 포항 요

양원 화재나 전남 장성 노인요양원 화재에서 보듯이 화재 후 막대한 인명피해에 따른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당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초기소화 및 신속한 인명 대피로 인한 이득을 감안하면 점검 비용은 전기·가스비용처럼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정 소방대상물 건물주는 소방특별조사 시 소방시설 고장·방치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소극적이다. 소방시설은 화재가 나지 않는 한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지난 경북 포항 요

양원 화재나 전남 장성 노인요양원 화재에서 보듯이 화재 후 막대한 인명피해에 따른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당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초기소화 및 신속한 인명 대피로 인한 이득을 감안하면 점검 비용은 전기·가스비용처럼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정 소방대상물 건물주는 소방특별조사 시 소방시설 고장·방치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소극적이다. 소방시설은 화재가 나지 않는 한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지난 경북 포항 요

양원 화재나 전남 장성 노인요양원 화재에서 보듯이 화재 후 막대한 인명피해에 따른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당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초기소화 및 신속한 인명 대피로 인한 이득을 감안하면 점검 비용은 전기·가스비용처럼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정 소방대상물 건물주는 소방특별조사 시 소방시설 고장·방치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소극적이다. 소방시설은 화재가 나지 않는 한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지난 경북 포항 요

양원 화재나 전남 장성 노인요양원 화재에서 보듯이 화재 후 막대한 인명피해에 따른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당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초기소화 및 신속한 인명 대피로 인한 이득을 감안하면 점검 비용은 전기·가스비용처럼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정 소방대상물 건물주는 소방특별조사 시 소방시설 고장·방치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소극적이다. 소방시설은 화재가 나지 않는 한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지난 경북 포항 요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fire, and social welfare.

Table with 2 columns: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editorial.

올바른 콘텐츠는 올바른 정신에서

기지사설



이보람
문화부 기자

지난 11일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 청자미디어센터가 공동으로 1인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시작했다. 이들은 총 25명을 선정해 3주간 7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유튜브에 공유하고 상영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전남문화관광재단 역시 전남 지역의 관광지를 담은 UCC 영상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별다른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렇듯 방송이 가능한 정도의 높은 화질을 지닌 스마트폰과 전국 어디서나 잘 터지는 와이파이 덕에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과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와 높은 수입을 얻는 유튜브(유튜브를 하는 사람)의 영향으로 1인 크리에이터가 최근 초동학생 장래 희망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학

센터에서 진행하는 1인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도 콘텐츠 ‘제작’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편집해 플랫폼에 게재하는 일련의 과정만을 다룬다.

그러나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만든 콘텐츠들은 선정성과 폭력성 등은 높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 자극적으로 제작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제작할 수 있다는 점과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와 높은 수입을 얻는 유튜브(유튜브를 하는 사람)의 영향으로 1인 크리에이터가 최근 초동학생 장래 희망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학

자극성 콘텐츠가 넘쳐나는 이유로 1인 크리에이터들의 미디어 도덕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자극적인 콘텐츠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히려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청자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들은 “내가 왜 건전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단체들은 제작을 통해 결과물만을 만들어내는 교육에 앞서 올바른 미디어

예절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예절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